

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 일시	2019. 3. 7.(목) 총 8매(본문 7, 붙임 1)	
담당 부서	기획재정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이수호, 서기관 권영규, 주무관 차석근 • ☎ 044) 200-5120, 5121, 5122
보 도 일 시		2019년 3월 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7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- 해양수산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-

- 해양수산부(장관 김영춘)는 3월 7일(목) 정부세종청사에서 ‘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’을 발표했다.
-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, 수산혁신,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.

### <6대 중점과제>

- 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.
- ② 연안·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.
- ③ 「수산혁신 2030」, 2019년을 수산업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.
- ④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겠습니다.
- ⑤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.
- ⑥ 세계적인 해양지도자(리더)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첫째,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.

### <해양환경>

-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2017년보다 50%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.

- 올해 상반기 중 「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배출 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,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든다.
  - 아울러,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도 측정할 계획이다.
- 선박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.
  -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\*하여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.
  - \* 연료유 황함유량 3.5% → 0.5% /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(2019년 상반기)
  - 민간 액화천연가스(LNG)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, 예선에 대한 액화천연가스(LNG) 전환시범사업(2019년 28억 원, 2척)도 신규로 추진한다.
-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(인프라)도 확대한다.
  - 부산항,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(2019년, 8선석)한다.
  -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\*도 액화천연가스(LNG)로 전환(2019년 100대)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.
  - \*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부두와 컨테이너 야적장을 오가며 컨테이너를 운반, 적재하는 장비
-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한다.
  -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·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\*을 확대하고, 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,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\*\* 등도 추진한다.

- \* 어업인이 집하장에 자발적으로 배출한 폐부표·폐어구를 국가 등이 처리·재활용 (2019, 폐부표 10개소 / 폐어구 4개소)
- \*\*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(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추진/국회 계류 중)
-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다지킴이를 운영(200명, 2019~) 하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\*(2019, 실태조사)과 해양미세 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도 시행한다.
- \* 쓰레기 집하장 설치, 수거 전용 차량·선박 제작 및 운영, 상시수거 등
-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」을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.

### <해양안전>

-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(2019년 7월)하여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,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.
- 또한,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확대(106명→142명)하고, 낚싯배 선장 자격 기준 강화,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, 영업구역 이탈 확인시스템 구축 등 여객선,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.
- 특히,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도 올해 가시화된다.
  - 올해부터 최대 100km까지 도달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하여, 올해 말부터는 여객선, 낚싯배를 중심으로 안전항로 설정, 충돌 사전경보 등이 가능한 이내비게이션(e-Navigation)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  - 100km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최대 1,500km까지 어선 위치확인 및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.

□ 둘째, 연안과 어촌을 국민의 삶의 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만든다.

-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70개소에 1,729억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하고,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 공모 절차(70개소 이상 선정 추진)를 시작한다.
- 아울러, 유희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과 배후도시를 통합 개발한다. 올해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, 인천항 1·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.
- 특히, 해양레저·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누어 특성화하는 한편,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해양레저·관광 복합지구\*(2019년 3개소: 전북 군산, 강원 고성, 제주)를 조성한다.

\*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, 해양레저 창업지원 기능이 복합된 지구

☞ 군산 마리나형(430억원), 강원 고성·제주 수중레저형(410/400억원) / 2019~2021

-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를 조성(2019~2021년 총 189억원)하고 부산, 경남에도 마리나 사업(비즈)센터를 건립\*하여 새로운 해양레저·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.

\* 부산(480억원)·경남(190억원) 마리나 사업(비즈)센터 건립 추진(2019~2021)

□ 셋째, 「수산업 혁신 2030 계획」에 따라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여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.

- 우선,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\* 대상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,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어종 확대(참조기 등)도 추진한다.

\*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, 그 한도내에서 어획 허용

- 아울러, 선제적으로 강화된 총허용어획량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, 어구·어법 등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.
-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\*을 대폭 확대하고, 자율휴어제 지원사업(고등어 대형선망, 2019.4~2019.7 / 휴어기동안 선원 인건비 지원)도 새롭게 도입한다.

\*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: 2018년 193억원 → 2019년 332억원

- 양식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 협력지구(클러스터)를 조성(부산, 충북 괴산, 2019~2021년)하고,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.

\*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기반(플랫폼) 개발(해수·과기·산업부, 2019년 하반기 예타신청) 소규모 양식어가용 기술개발·보급(자동먹이공급장치 등/2019~2021년 24억원)

- 이와 함께, 수출산업화를 위해 목포와 부산 등에 수출가공 협력지구(클러스터) 조성\*을 추진하고 어묵,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\*\*도 강화한다.

\* 목포 수출가공 협력지구(예타면제 확정), 부산 협력지구(사업계획 수립, 2019년 하반기)

\*\* 수출유망상품화(2019년 15억 원) 및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(2019년 40억 원)

- 넷째, 해운·항만산업은 해운재건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세계 해운 물류망 복원에 나선다.

-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척 신조를 비롯한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조·개조를 지원하고,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통한 해운물류기업 규모화도 지원\*한다.

\*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,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 추진

- 해운 물류망 복원을 위해 선박 신조(새로 만드는 것)를 바탕으로 미국·유럽 등 원양항로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해외터미널 운영권 확보\* 등도 추진한다.

\* 선사·하역사·항만공사·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참여 K-GTO(Global Terminal Operators)

-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「신항만 건설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.

□ 다섯째, 해양수산업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.

- 해양모태펀드(2019년 정부 200억원 출자)를 신규로 조성하고, 해양수산 창업기획자(Accelerator) 제도\*를 신설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.

\*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·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제공

- 또한,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(LNG) 추진선 도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.

- 우선, 친환경·고효율 선박 신조 시에 선가의 10%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(2019년, 85억원)에 더하여, 친환경 설비 설치 이차보전사업(2019년, 40억 원)과 친환경 설비 상생펀드\* 조성도 추진한다.

\* 화주·조선업체·선박유류공급업체가 450억원을 투자하여 원양선박 스크러버 장착 지원

- 스크러버\* 성능 개선과 핵심기술 국산화 등 기술개발도 병행하여 시장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.

\* 액체를 이용해서 가스 속에 있는 고체, 액체입자를 모으는 장치

□ 여섯째, 해양영토 수호와 더불어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.

-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, 영해 기점에 영구시설물도 확충(2019년, 4개소)하여 해양영토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.
- 또한, 극지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‘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’ 건립(2019년~2021년)에 착수한다.

- 남북 협력에 있어서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, 서해·동해 관광특구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.
-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올해는 수산혁신, 해운재건 등 해양 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,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.”라고 하며,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를 보였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          단, 사진, 이미지, 일러스트,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         아니하므로,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.</p>
--	--

비전

“글로벌 해양강국, 대한민국”

19년  
목표

- 어촌뉴딜 사업개소(누적): '19, 70개 → '22, 300개
- 수산물 수출액: '18, 23.8억원 → '19, 25억불 → '22, 27조원
- 해운산업 매출액: '18, 34조원 → '19, 37조원 → '22, 51조원
- 스타트업 성공모델(누적): '18, 50개 → '19, 100개 이상 → '22, 200개

주요 정책

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.

- ① 항만 미세먼지 저감
- ②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관리
- ③ 해양공간 통합관리
- ④ 해양오염원 관리 및 해양 생태계 보전
- 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등 사고예방 강화
- ⑥ 해양사고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

② 연안·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.

- ① 어촌 뉴딜 300 사업 착수
- ② 해양 레저·관광 거점 조성
- ③ 유희 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
- ④ 연안·어촌 접근성 향상 및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

③ 수산혁신 2030, 2019년을 수산업 혁신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.

- 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제도 정착
- ② 친환경·스마트 양식 확대
- ③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·가공 산업화
- ④ 소비자 중심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
- ⑤ 귀어귀촌 지원 및 어촌 복지망 확충

④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겠습니다.

- ①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
- ②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
- ③ 우리나라 항만을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조성
- ④ 선원 등 해운물류 인력 양성

⑤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.

- ① 해양수산 스타트업 육성
- ②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
- ③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
- ④ 해양바이오·에너지, 첨단 해양장비 등 상용화

⑥ 세계적인 해양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① 해양영토 수호 및 親해양문화 확산
- ② 해외 해양수산 자원 확보 및 대양·극지연구 선도
- ③ 신북방·신남방 등 국제 협력 강화
- ④ 해양수산 남북 협력사업 준비